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북한을 변화시키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최근 천안함 사건과 계속되는 UN제재 등으로 북한은 점차 고립무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중국의 지원 하에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만을 영위하고 있다. 황폐화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통일비용을 경감시키는 길이기도 하지만,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상당 기간 필요하겠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지원에 대한 내성만을 키우게 할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 관료나 주민에게 서방세계의 경제발전 과정을 교육시키는 간접적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화폐개혁 실패, 자연재해, 각종 기초 산업시설 기반 붕괴,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규모 축소 등 어느 하나 낙락치 않다. 이제 북한은 싫다 하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기는 그리 멀지 않으리라 본다.

중국 주도하의 북한 변화 유도도 실효적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수사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한국과 외부 세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북한 경제 실태와 식량문제
 - 가. 북한 경제 현황
 - 나. 북한경제의 문제
 - 다. 북한 식량문제
2. 한국의 대북지원과 대외 원조 현황
 - 가. 대외 원조 현황
 - 나. 대북 지원 실태
 - 다. 정부의 잉여 쌀 대책
3. 인도적 지원재개를 위한 선결과제
 - 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 나. 분배의 투명성
4. 북한 제재전략의 한계
5. 북한의 변화 전망과 과제
 - 가. 북한의 변화 유도 방향
 - 나. 북한의 변화 가능성
 - 다. 북한 정부의 진정한 변화, 그 과제

1. 북한 경제 실태와 식량문제

가. 북한 경제 현황

- 한국은행 통계('10년 6월)에 따르면 냉해로 인한 옥수수 등 농작물 생산의 감소와, 전력 및 원부자재 부족 등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 부진 등으로 북한 경제는 작년 마이너스 0.9%의 성장률을 나타냈음.
 - 북한은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99년부터 '05년까지는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였음.
 - 그러나 '06~'09년까지 '08년을 제외하고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09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상품기준)는 34.1억 달러(남북교역 제외)로 전년(38.2억 달러)보다 축소되었고, 수출은 비금속 제품과 광물 등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6.0% 감소한 10.6억 달러, 수입은 23.5억 달러로 전년대비 12.5% 감소하였음.
 - 한편 '09년 중 남북교역 규모는 개성공단으로의 원부자재 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역 및 대북지원의 감소로 전년보다 7.8% 감소한 16.8억 달러였음.
- 이와 같이 '09년 북한 무역규모는 남북교역을 포함하여도 50.9억 달러로 남한 무역규모의 0.74%에 불과함.
- KDI 보고서에 의하면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북한은 연간 2억8천만 달러 상당의 외화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 남북 교역규모 16.8억 달러는 북한 전체 무역량의 32.8%로, 남한은 남북 교역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만 그에 비해 북한은 그 피해 강도가 심할 것으로 추정.
 - 그러나 다른 대북 전문가들은 실제 북한이 남북교역 중단으로 받는 피해는 1억~1.5억 달러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음.
- 남북 교역의 중단은 대중 달러 결제 부족으로 이어져 석유, 곡물 등 주요 수입이 어려워지는 등 북한 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특히 국제적인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의 대폭적인 경제 지원이 없는 한 금년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음.

나. 북한경제의 문제

- 북한이 조만간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북한 체제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북한의 경제는 '90년대 구소련을 포함한 공산권의 붕괴와 당시 엄청난 수해 피해 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함.
 - 산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부재.
 - 기존의 공장설비 가동률 하락.
 - 수해로 인해 농업생산 및 광업 생산 감소.
-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외자유치 실패.
 - 투자비 회수에 대한 불안, 각종 인프라 시설의 낙후, 한반도 리스크. (핵문제 등으로 인한 UN 제재 등)
- 유일한 민간시장 기능인 장마당의 후퇴.
 - '90년대 시작된 장마당이 국가가 배급하지 못한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으나, 작년 화폐개혁 조치로 후퇴.(일부지역 소생 조짐)

다. 북한 식량문제

- 북한의 식량부족은 불규칙한 배급, 장마당의 물가 상승, 계속되는 수해 피해, 비료 부족, 외부 지원 축소, 수입물량 감소 등 수요와 공급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
- 통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량은 520만~550만 톤이며 생산량은 411만 톤, 수입량은 연간 20만 톤으로 부족분은 연간 약 90만~120만 톤으로 추정됨.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올해의 식량 부족분을 125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음.
- 북한은 '05년부터 유엔 기구들의 식량지원 등 외부지원 제의를 외면하여 왔으나, 금년 8월 발생한 압록강 일대의 대홍수와 북한 전역에 걸친 폭우로 농경지 2,000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상황을 보도하며 평양 주재 유엔 회원국 대표팀에 공식적인 홍수 피해 지원을 요

북한의 식량부족은 불규칙한 배급, 장마당의 물가 상승, 계속되는 수해 피해, 비료 부족, 외부 지원 축소, 수입물량 감소 등 수요와 공급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

**북한의 만성적인 쌀
부족은 세계적인
자연재해 증가,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 중국의
불안정한 곡물 공급의
영향으로 인한
국제사회지원 감소 및
쌀 배급 중단과 가격
급등에 기인함**

청한 바 있음.

- 북한의 만성적인 쌀 부족에다 최근 서북지역 곡창지대인 신의주 등지의 홍수 피해로 인해 내년도 쌀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 특히, 최근 홍수로 인해 북한 전역에 수인성 질병 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북한 주민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 국제사회 지원 감소.
 - 세계적인 자연재해 증가,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 중국의 불안정한 곡물 공급의 영향 등으로 국제 구호단체의 식량 확보 애로.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앞으로 2년간 대북 사업에 9천6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지원 예산은 단 1%에 불과하며, 현재 보유한 식량으로는 앞으로 약 두 달 정도의 식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함.
 - ※ 세계보건기구는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에리트레아, 수단 등과 함께, 북한을 식량 확보가 가장 취약한 나라로 분류
- 쌀 배급 중단과 가격 급등.
 - 평양시까지도 쌀 배급이 어렵고 이에 따라 장마당 쌀 가격 변동 극심.
 - 통일부, 탈북자 등에 따르면 화폐 개혁 직후에 1kg당 20원이었던 쌀 값은 3월 중순 1,000원, 4월 초엔 500~600원, 8월에는 다시 1,000~1,300원으로, 불안정한 수급구조로 인한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의 식량 가격 변동은 쌀 생산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나, 대 북한 쌀 수출국가인 중국의 위안화 가치 상승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7월 30일 함경북도 청진, 무산 등의 지역에서 중국 돈 100위안은 북한 돈 3만 원에 환전, 7월 20일 경 중국 돈 100위안이 2만 원 이었을 때보다 무려 50%가량 상승한 환율
 - 또한 일부 외상구매를 허용했던 중국 무역상의 현금결제 요구로 인한 대금결제 능력 부족도 북한의 식량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임.

2. 한국의 대북지원과 대외 원조 현황

가. 대외 원조 현황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지원형태별로 양자 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뉘며, 원조 자금의 상환여부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

-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원조규모가 '95년도 1.1억 달러 → '08년도 8.03억 달러
- 이 중 무상원조는 369.33백만 달러로 전체 원조액의 46%임.
 - 무상원조사업은 외교부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국가 및 사업을 결정.
 - 무상자금협력은 증여성 원조로서 크게는 물자 또는 현금지원, 인프라 건축으로 구분. '80년대까지 증여성 원조는 기자재 공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프로그램형 지원(연수생초청,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등의 비중이 증가 추세.
 - ※ 수혜국가 및 국제기구는 각 119개국 및 20개 기구. 지역별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지역이 38.9%로 가장 높고,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순으로 3개 분야가 전체 지원액의 약 48%를 차지
- 양자 간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해 지원함.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재정·용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구성. '87년 기금설립 이후 '08년 말까지의 총 조성액은 21.169억 원이며 지원 이자율 연0.5%~3.0%임.
 - 지원 대상 국가는 OECD/DAC(開發援助委員會,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규정하는 개도국 및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산업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87년부터 '07년도 말까지 43개국, 172개 개발사업에 31.900억 원(약 27.65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개도국에 지원.
- '08년 우리나라의 국제기구(UN기구 등 분담금, 세계은행 등 출자·출연, 기타 국제기구 용자금 지원)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263백만 달러로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32.7%를 차지함.

무상자금협력은 증여성 원조로서 '80년대까지 증여성 원조는 기자재 공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프로그램형 지원(연수생 초청,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등의 비중이 증가 추세

나. 대북 지원 실태

- '95년 홍수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에 쌀 15만 톤 무상지원을 실시한 이후 차관 형식으로 '00년부터 '07년까지 연간 40만 톤 규모로 제공함.
 - ※ 세계 쌀 생산국가의 반대로 차관 방식 변경(연이율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10년부터 무상지원으로 변경

천안함 사건발생 후**인도적 지원은****선별적으로 하겠다는****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정부는 알곡 형태의****쌀 지원은 어렵더라도****인도주의적 차원에서****쌀 가공형태별, 나라별****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검토 중임**

○ 우리 정부는 '08년 이후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천안함 사건 발생에도 인도적 지원은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최근 발생한 북한 수해에도 쌀 지원만은 유보적 태도를 견지함.

○ 대북지원 현황

- 민간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 규모는 '02년 13,492만 달러(정부 지원 8,915만 달러)에서 '07년 30,461만 달러(정부 지원 20,893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08년 10,436만 달러(정부 지원 3,977만 달러)로 급감.

다. 정부의 잉여 쌀 대책

○ 정부가 전망한 올해 쌀 재고는 149만 톤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적정량 72만 톤의 2배 수준임.

- 미국 농무부는 내년 한국의 쌀 재고가 소비 감소 및 수입량 증가 여파로 올해보다 늘어날 것(164만 톤)으로 예측.
-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용 쌀의 유지비용으로 한 해에 3,57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

○ 최근 정부는 알곡 형태의 쌀 지원은 어렵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에 쌀가루 형태의 가공제품을 지원할 경우,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 등이 쌀 가공형태별, 나라별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05년에 생산한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도 있음.

-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36만 톤 처분 가능.

○ 가공용 쌀 시장이 연간 10만 톤으로 매우 협소하고 가공용 외국쌀은 20만 톤 이상씩 수입되어, 가공용으로는 재고 소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함.

○ 남북 관계 경색으로 연간 40만 톤의 소비처가 사라졌으나,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에는 쌀 지원 가능함.

3. 인도적 지원재개를 위한 선결과제

- 한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은 일시적이고 땀질식 처방에 불과해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

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 및 한국정부의 쌀 지원으로 북한의 식량 부족 해소 가능함.
- 유엔식량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쌀 40만 톤 지원, 중국 30만 톤, 미국 30만 톤, WFP 10만 톤 등을 합치면 북한 부족분 100만 톤을 채울 수 있다는 관측.

나. 분배의 투명성

- 북한에 가장 많은 쌀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 재개될 경우, 군부와 같은 곳에 전용되지 않고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절히 확인할 수 있어야 식량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함.
- 우리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 동조함.

미국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 재개될 경우,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절히 확인할 수 있어야 식량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함

4. 북한 제재전략의 한계

- 북한에 대한 제재 전략이나 무시 전략에 북한은 강경책으로 대응함.
- 북한은 핵실험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의 긍정적인 행동변화(핵 포기 등)를 이끌어낸 적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핵실험 강행,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등)만 초래함.
- '06년 미국은 북한의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으로 지목된 방코델타아시아를 문제 삼아 제재를 취했으나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함.

중국,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하고 있으나 북한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핵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북한 체제상 한국 등 관련국들의 지속적인 다방면적인 지원이 오히려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음

- 중국,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하고 있으나 북한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핵카드를 이용하고 있음.
- 북한이 남한의 인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얻은 재화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했다는 전례 때문에 선뜻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연구원의 리언 시걸 동북아 프로젝트 국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과거의 포용 정책 역시 북한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포용책이 더 성공할 가능성도 있으며, 지속적인 포용을 통해 폐쇄된 북한 사회의 문이 당장 활짝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북한 주민의 의식은 물론 북한 내부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견해를 주장함.

5. 북한의 변화 전망과 과제

가. 북한의 변화 유도 방향

- 북한이 자발적으로 변화와 개방의 세계로 나올 수도 있지만, 북한 체제상 한국 등 관련국들의 지속적인 다방면적인 지원이 오히려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음.
- 대북 인도적 지원, 즉 기초적인 의료품 지원, 모니터링을 강화한 쌀과 비료의 지원은 적절한 시점에 재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북한 수해 피해 지원이 남북관계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 향후 통일비용(380조~5,850조)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함.
 - 클린턴 정부 때 핵 포기 대가로 경수로 건설, 중유지원 등의 경제적 인 보상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전례도 있음.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전략 구사 필요.

- 경제적 지원(인도적 지원 포함)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계속 요구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전용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음.
 - UN 제재 등으로 북한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
 - 최근 중국도 북한의 체제붕괴를 피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지원하는 공적원조 프로그램의 북한 도입도 검토가 필요함.
-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산업인력이나 경제 관료를 한국이 아니더라도 외국기관에 위탁시켜 훈련하고 산업현장 교육.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 경제 관리들이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 시스템을 배우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이해하며, 아울러 경제관료나 이해 당사자의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간접적 경제 지원 방식 도입.
 - 국내기관이 가장 좋은 대안이나, 북한이 꺼릴 수 있어 사업 초기에는 UN, OECD 등에 위탁해 북한 인력이 대학, 연구소 혹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 체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 민간 차원의 접촉·교류 방식인 ‘트랙 투(Track Two)’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천안함 사건 등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NGO단체나 민간기업인이 북한 관련 단체나 기업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 조치 필요.
 - 필요한 경우, 정부는 소극적 관여 혹은 정책방향 제시에 국한.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북한 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물자 지원보다 자원개발, 농업개발이나 보건의료 같은 공동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산업협력 틀 속에서 남북한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협력이 필요함.

**북한 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개발이나 보건의료
같은 공동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산업협력 틀
속에서 남북한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협력이 필요함**

나. 북한의 변화 가능성

- 북한은 경제발전보다 체제 유지가 더 큰 목표임.

**중국 주도하의 북한의
변화 유도도 실효적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역설적이긴 하나 체제유지를 위해 점진적 개방 가능성이 매우 높음.
 - '12년 강성대국 건설, 김정일의 건강 문제, 후계구도 등과 맞물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우선 개방정책을 펴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3년 내에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임.
 - 특히, '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이외에 남한과 미국 등 서방 자본 유치가 관건임.
 - 1차로,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 및 나진·선봉 특구의 재지정(각종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우선.
- 중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적 포용과 관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안보적 영향력 확대와 개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은 압록강 대교건설, 황금평 및 위화도 개발, 나진항 및 청진항 부두 사용 계약 등 중국의 이익을 위한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음.
 - 북한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건, 핵실험 등 서방세계의 제재 조치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의 돌파구로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중국 주도하의 북한의 변화 유도도 실효적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최근 북·중 협력 가속화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개방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국에는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음.
 - 북한의 중국에 대한 주요 항만 장기 사용권, 지하자원 장기 채굴권 양도 등은 남북공동체 건설과 통일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 야기.

다. 북한 정부의 진정한 변화, 그 과제

- 북한의 살길은 변화와 개방이지만, 변화 과정에서 진정성이 없는 수사(修辭)적인 구호만으로 서방 자본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는 없음.
- 핵 문제 등 정치적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 양질의 인력, 같은 언어 사용, 가까운 거리 등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좋

은 조건을 구비함.

- 그럼에도 중국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북한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
- 우리 기업의 대 북한 투자는 남북 상생발전에 중요.

○ 북한의 변화유도는 경제 회생 지원이 실질적이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외자 유치가 당면 과제임.

-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해서는 잃었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 또한 투자에 필요한 각종 관련 법·제도 정비도 시급.
- 북한은 그동안 투자기업의 투자비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역거래에서도 납기지연, 품질미달 등으로 불신 자초.
-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남한기업 포함)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과실송금, 세금, 노동인력 고용, 경영권 보장 등 실질적인 투자활동 보장에 미온적.

○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대책과 이용권 보장이 필요함.

- 북한은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 운반을 위한 철도, 항만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없음.

○ 통행, 통신 보장책 마련도 중요함.

- 중국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연락이 보장되지 않아 외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미 조성.

○ 북한은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음.

- 화폐개혁 실패, 자연재해, 각종 산업시설 기반 붕괴,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규모 축소 등 어느 하나 낙락치 않은 상황.

○ 북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상당 기간 필요하겠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지원에 대한 내성만을 키우게 할 우려도 있음. 북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며, 나아가 북한 지도층 스스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들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과제임.

북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며, 나아가 북한 지도층 스스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들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과제임

편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국문에디터: 강길효(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